

다시 꺼내든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카드

文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에 "함께 방북해 남북 국회회담 단초 마련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9월 평양 회담과 관련해 "방문 시기, 방북단의 규모,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할 해야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밝히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 자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영완 민주당 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준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분기별 개최'를 제안하며 여야정 간 협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국민은 정말 여야정 간 협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각 당 대표님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실상 구두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는데 그것이 그 뒤로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지난해 9월27일 만난 회담을 갖고 여야정 상설국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후로 여야 간 정쟁이 이어져 그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늘에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하기 위해 분기에는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 합의해 낼 수 있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말문을 뗐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

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한다"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공약을 거론하며,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했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지만 그때도 각 정당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 과학기술원 설립돼야" 정동영 민주당 당대표 기자간담회 1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정동영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가 전북 과학기술원(과기원) 설립을 주장했다.

김경수, 드루킹 특검과 담판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적용 박범석 부장판사 구속 심사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구속 위기에 서게 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도 이날 심사 결과에 앞날이 갈 것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심사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박범석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뉴너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데이터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

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됐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드루킹과 그의 범행에 가담한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다수 구속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해야 할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는 점, 그간 2차례 소환 조사에 충실히 임해왔던 점, 드루킹이 최근 조사에서 진술을 반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특검팀의 구속수사 시도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담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다"고 밝혔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뉴시스

"기재부,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했나?"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워나가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발을 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16일 유성엽(사진·민주당 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바꾸어 놓았다.

또한 이와는 대비 되도록 '혁신성장'을 메인에 띄우고, 별도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자임금 속도조절론 언급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데 이어,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도 혁

신성장만 강조되다 보니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의 최근 행보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혁신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경제 정책의 실패를 국민 앞에 인정하고 설명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

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양대 기관인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갈등을 빚는 동안, 경제성장률은 최저로 내려가고 실업률과 생활불거는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GDP 순위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누가 옳은지 따지고 있다면, 경제부처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김진성 기자

국회, 최소 영역 외 모든 특활비 즉각 폐지키로

목적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 내년 예산도 대폭 감축 편성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올해 특활비의 경우특활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의활동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며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고 했다.

/뉴시스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 전주매일 창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 1 (토) ~ 9. 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